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5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현장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행정차관,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 익산시 정현을 시장 등 도내의 기관 단체인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등 정계 주요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립익산박물관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첫 삽'

367억원 투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설계

2019년부터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사도 착수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공식 행사가 5일 익산에서 열렸다. 건립현장에는 송하진 도지사,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행정차관,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 익산시 정현을 시장,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최영규·한희경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국립익산박물관의 첫 삽을 뜨게 됨을 축하하고 건립 취지와 기능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건축계획 보고 및 기공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공사는 2015년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3개월간 설계용역을 진행했다. 그 해 12월 감리사로 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시공사로는 선해종합건설을 선정했다. 당초 국립익산박물관은 전북도에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1995. 1~ 2015. 12) 관리해오다가 2015년 12월 30일자로 국가기관으로 이관됐다.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터

로 3탑 3급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의 탁월한 독창성을 보여주는 곳으로 사적 제15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특히 미륵사지 터에 남아있는 목탑형식의 석탑으로 유명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은 2009년 1월 석탑 해체과정에서 사리장엄구를 포함한 사리봉여기 등 9,700점의 엄청난 백제관련 유물이 쏟아져 나와 학계 및 일반에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런 발굴성과와 역사적 가치로 인해 2015년 7월 왕궁리유적과 함께 백제역사지구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에 익산 미륵사지와 출토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보존

과 전신을 위해 2015년 12월 국가기관으로 승격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것이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367억원이며 연면적 7,500㎡의 지하2층, 지상1층의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개축 설계 및 공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립익산박물관이 새롭게 개관하면, 우리나라 4대 고대 중 하나인 익산 문화권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 /김진성 기자

남북은 5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의견·경호·보도 관련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마쳤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4시간 가량 마라톤 회담을 진행했다. 길어질 것을 대비해 남북이 각자 식사를 준비했지만 회담은 씬 없이 이어졌다. 남북은 회담 후

남북 실무회담 종료...靑, 안전 등 고려 구체적 내용 미공개

별도로 식사를 한 뒤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분야 협의를 위해 회담에 참석했던 권혁기 춘추관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경호와 의전 관계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회의를 했다"며 "진지하고 꼼꼼하게 회의를 했다. 해야 할 논의는 다 했다"고 말했다. 권 관장은 그러면서 "이후 후속회담을 한 번 더 하자고 했다"며 "(후속회담이) 2회에 끝날지 3회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관련 실무회담이 3회에 걸쳐 진행됐던 만큼 이번에도 후속 회담이 열

마나 더 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경호·의전·취재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안전 등을 고려해 최종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구체적인 회담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군산,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돼

정부,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5일 정부는 군산시를 비롯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취업대책 수립 등 혜택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군산지역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 특별지원과 실업자의 실업급여 특별연장,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처럼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군산시의 경우 영세협력업체 임금확보 지원, 수요맞춤형 부품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강소화 추진

등 긴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으며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중소형 선박기자재 산업 등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비대위는 "정부의 이번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관계자는 "하지만 한달 넘게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우리 해고 근로자들이 요구했던 지원 대책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정부 측은 그동안의 지원 사례의 유무를 떠나서 이번 특별지역 지정을 계기로 해고 근로자들이 요구한 지원 방안들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100명이 넘는 해고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하루 빨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김형철 경제발전국장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조선소 재가동과 정상화만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달 16일과 23일 각각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자원부에 신청했으며 같은 달 28일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지역을 방문,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매일 INDEX
2면 -전주시장 예비후보 공약 살펴기 4면 -지역 건설산업 활로 찾는다